

멸종위기종 10종→29종...생물자원·생태계 회복

무등산이 지역민의 염원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오는 4일이면 꼭 10년이 된다.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생태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3월 4일 국내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내 최초로 시민이 만든 국립공원으로 불리는 무등산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봤다.

◇**생태가치를 회복한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무등산에는 사라졌던 담비, 하늘다람쥐, 남생이 등 멸종위기 동물이 찾아왔다. 동·식물의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은 10년만에 10종에서 29종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전에는 수달, 삿, 산작약 등 동물 8종과 식물 2종이 자생했지만, 현재는 수리부엉이, 맹꽁이, 팔색조 등 동물 24종과 가시오갈피나무, 대홍련 등 식물 5종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산에 살고 있는 전체 동·식물의 수도 2296종에서 4108종으로 10년만에 약 2배 증가했다.

현재 무등산에는 동물 1699종, 식물 1729종, 균류 포함 기타 680종 등 총 4108종이 서식하고 있다. 동물의 경우 포유류 31종, 조류 13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16종, 어류 29종, 곤충 1477종이 살고 있어 생물자원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성과와 과제

동·식물 2296종→4108종으로...주상절리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위법 행위 18건→715건 급증...흡연·취사 등 시민의식 결여 여전 화암야영장 개발·군부대 이전·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 과제도 산적

특히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지난 2018년 4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된 뒤, 최근 재인증이 공식화돼 오는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무등산 내 사유지를 매수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져왔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부터 사유지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도 무등산에는 방치된 목장들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0년간 예산 2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830만㎡를 매입했다. 이에 전체 사유지 비율은 2013년 75%에서 2022년 64%로 11% 감소했다.

◇**아직도 부족한 시민의식**=무등산은 국립공원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고 변화하는데, 무등산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시민의식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243만

여명에 달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2013년에는 396만여명이 찾았으나 2017년 351만명으로 감소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2020년 24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1년 239만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지난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해 수백만명이 무등산을 오르지만 고발, 과태료, 지도장 등 최근 10년간 위법행위 단속 현황은 2013년 18건에서 2022년 715건으로 4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과태료 대상으로는 무단주차가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등산로 출입 155건, 흡연행위 145건 등의 순이었다. 취사(109건), 음주행위(40건), 야간등반(11건)과 같은 행위도 적발돼 아직도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질서외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 등으로 고발된 사례도 26건에 달하

고 있다.

생태계교란종 확대에도 시민들의 불법행위가 영향을 끼쳤다. 붉은귀거북과 같은 외래생물 불법방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들여온 생태계교란종을 키우다 방생해 무등산 고유종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방생된 생태계 교란 동물을 2013년 10건에서 2022년 14건 제거했다고 밝혔다. 무등산 전체를 감시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래 생물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10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단체의 보호 요구와 무등산국립공원내 지역민들의 개발 허가 요구가 부딪히고 있는 점에

서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은 최근 광주시 북구 화암동 291번지 일대에 자연의 풍광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화암야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야영장 계획 부지는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됐던 곳으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의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보호구역

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인근에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평두메습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철거 및 복원 사업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2013년부터 노후 상가 슬럼화를 막고 공원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원효사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공단 감사실은 광주북부경찰에 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3명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무등산 정상개방을 앞두고 군부대가 주둔하며 훼손된 환경 복원에 주요 과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정상부 주변 철책을 제거하고, 정상부 훼손 현황과 식생구조를 조사해 식생 복원에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진행되면서 무등산에도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재점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도 국립공원무등산지킴이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국립공원은 보전과 이용 등 두가지 측면이 항상 충돌한다"며 "인간 중심의 편리성이나 이용을 리틀 앞세우기보다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잘 물려줄 수 있는 세계 속의 무등산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4일 무등산 정상 개방...시내버스 증차 운행합니다

광주시, 평소보다 60회 늘려

광주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무등산 정상을 개방하는 4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원효사행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증차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187번과 1187-1번 등 2개 노선이며, 평소보다 60회 늘어난 172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1187번 노선은 덕흥동에서 광주중합버스터미널-광주역-금남로4가역-금남로5가역-국립

아시아문화전당-법원입구-산수오거리-장원초교 등을 경유해 원효사까지 탐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8-15분 간격으로 17대가 124회 운행한다.

또 1187-1번 시내버스를 증차해 행사 당일 48회 운행하면서 문화전당역 등에서 지하철도 다른 시내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운행한다. 중심사 방면은 9개 노선 118대 999회를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증차는 하지 않는다.

무등산 정상 개방 구간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코스(서석대

→지왕봉→부대정문, 0.9km)다.

정상 개방 행사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광수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무등산이 세계적 명산임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를 대폭 증차해 탐방객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급식 식자재 정리 새 학기가 시작된 2일 광주시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학교에 공급할 식자재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대 민주동우회, 황일봉 부상자회장 제명

"공동선언 강행은 5·18정신 훼손"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에서 제명됐다. 지난 2015년 3월 동우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제명 조치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는 지난 1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황 회장을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총회에는 회원 10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9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

사동지회를 초청해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따른 조치다.

동우회에 따르면 공동선언식 이후 동우회 회원 20명이 황 회장 제명 등의 연명을 시작했다. 황 회장이 특전사 단체의 반성·사죄를 받지 않은 채 공동선언식을 강행해 5·18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했으며 동우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황 회장은 총회에 앞서 소명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들이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민단체들은 화해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동우회 측을 지적한 것으

로 전해졌다.

동우회 관계자는 "황 회장은 공법단체로서 5·18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사유화하면서 공동선언식을 강행했다"며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고 더 이상의 5·18왜곡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황 회장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또 "황 회장이 자신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본회의 목적에 맞게 솔선수범할 경우 언제든지 '회원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전남대 국문과 1981년 학번으로 1986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남대민주동우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당시 재학생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회원 570여명이 가입돼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지검, 담합 의혹 교복 판매대리점 22곳 압수수색

검찰이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교복 납품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입찰방해 혐의로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22곳의 점주를 입건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대리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들이 발주한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총 41회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에서는 중·고등학교(중학교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가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교복 납품업체가 선정된다. 하지만 올해 입찰이 완료된 중·고교 43곳의 교복 입찰가가 300원~1만원 이하의 차이를 보여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기초반, 중급반</p>	<h2 style="text-align: center;">전원주택 (1채) → 7,000만</h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h2 style="text-align: center;">상가매매(상무지구)</h2>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보3천, 월수익 380만)</p>
<h1 style="margin: 0;">010-2614-9801</h1>	<h1 style="margin: 0;">010-6670-9800</h1>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